

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 
제 2 소 위 원 회

심의·의결

안 건 번 호 제2024-217-564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 : )

의결연월일 2024. 8. 28.

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2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.

가. 온라인스토어 가입시 국외이전 및 제3자 제공(선택사항)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, 통합회원제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의 바코드가 온라인스토어 회원정보와 결합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·이행할 것

나.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가.의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

# 이 유

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일본의 캐주얼 의류 브랜드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 한국 사업을 운영하는 舊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<sup>1)</sup>(이하 '舊 정보통신망법')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「개인정보 보호법」<sup>2)</sup>(이하 '보호법')에 따른 개인 정보처리자이다.

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종업원 수 (명)

## II. 사실조사 결과

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언론보도('19.8.28.)에 따라 舊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2. 행위 사실

#### 가. 언론보도 관련 사실관계

##### 1) 언론보도 내용

피심인이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일본본사로 이관하면서 고지를 하지 않았고, 선택사항 미동의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('19.8.28.)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.

1) 舊 정보통신망법(법률 제16021호, 2018. 12. 24. 일부개정, 2019. 6. 25. 시행)

2) 개인정보 보호법(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 일부개정, 2023. 9. 15. 시행)

## 2) 사실관계 확인 결과

피심인은 온·오프라인 상담과 관련된 고객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일본 본사에 위탁하여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.

피심인은 온라인스토어<sup>3)</sup> 회원가입(웹·앱)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(선택사항)에 미동의할 경우 쿠폰사용 불가 및 서비스 등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한 사실이 있다.

### 나. 앱 설치·운영 관련 사실관계<sup>4)</sup>

피심인은 이용자가 앱을 설치·실행하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바코드를 생성·수집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 구매 후 바코드 태깅시 구매 이력을 수집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는 없었다.

## 3.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실관계

### 가. 국외이전 항목 미고지 관련

피심인이 일본본사에 고객상담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하여 일본본사가 한국 이용자의 이름, 메일 주소,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함에도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국외이전 관련 법정 고지 항목<sup>5)</sup>을 미고지('19.8.28.~9.26.)한 사실이 있다.

### 나. 선택사항 미동의시 혜택 제한 관련

피심인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상 국외이전 및 제3자 제공의 목적을 '고객별 구매 성향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'으로 명시하였으며, 당시 피심인의 쿠폰지급 방식상 일본 본사가 운영하는 쿠폰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여야했다.

3) 온라인 스토어는 한국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탁

4) 앱 설치시 생성·수집되는 바코드 등 일본 본사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함

5) 1.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, 2. 이전되는 국가, 이전일시 및 방법, 3.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 연락처), 4.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보유·이용 기간

## 다. 바코드 생성·수집 관련

피심인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앱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일본본사에 위탁하였고, 앱 DB가 일본에 위치하므로 바코드 정보와 오프라인 구매이력은 피심인을 거치지 않고 일본본사로 전송되며, 이용자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 통합회원 가입(앱과 온라인스토어 연결)에 동의하면 바코드 정보 및 구매이력은 그 시점부터 온라인스토어의 개인 정보와 연결<sup>6)</sup>된다.

## 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4. 7. 10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4. 7. 24.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 Ⅲ. 위법성 판단

### 1. 관련 법 규정

舊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(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처리위탁·보관(이하 이 조에서 “이전”이라 한다)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·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6) 피심인은 바코드 자체는 단방향 암호화된 정보로 복원이 불가능하고, 바코드 생성·수집 목적을 바코드 정보를 기초로 발생한 오프라인 구매이력을 통한 한국사업 시장현황 통계 작성 및 할인쿠폰 제공 등을 위한(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객에 한하여) 단말기 구분 목적이라고 소명함

## 2. 위법성 판단

### 가.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면서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지 않은 행위

[舊 정보통신망법 제63조(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)제2항]

피심인이 고객상담시스템 운영 등을 일본본사에 위탁하여 개인정보를 국외이전(처리위탁)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법에서 정한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('19.8.28.~'19.9.26.)는 舊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 IV. 처분 및 결정

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舊 정보통신망법 제63조(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)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(과태료)제2항제5호, 같은 법 시행령7(이하 '舊 시행령') 제74조의 [별표 9] 및 舊 「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」<sup>8)</sup>(이하 '舊 과태료 부과기준')에 따라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 가. 기준금액

舊 시행령 [별표9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.

< 舊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[별표9] 2. 개별기준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 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추. 법 제6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63조의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·보관한 경우	舊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제5호	600	1,200	2,000

7) 舊 정보통신망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9852호, 2019. 6. 11. 일부개정, 2019. 6. 25. 시행)

8) 舊 「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」 (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18-33-376호)

## 나. 과태료의 가중

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 2]의 가중기준(▲ 조사방해, ▲ 위반의 정도, ▲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 및 [별표 2]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하지 않고 기준을 유지한다.

## 다. 과태료의 감경

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 1]의 감경기준(▲ 당사자 환경, ▲ 사업규모 및 자금사정, ▲ 개인(위치)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 조사협조 및 자진 시정 등, ▲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[별표 1]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'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 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(600만 원)의 50%(300만 원)를 감경한다.

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舊 정보통신망법 제63조(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)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 <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 원)			
위반조항	처분 조항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(D) D=(A+B-C)
舊 정보통신망법 제63조(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)제2항	舊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2항제5호	600	-	300	300

※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 
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## 2. 개선권고

피심인의 당시 쿠폰 제공 방식상 일본본사에서 지급하는 쿠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, 동의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상에도 국외이전 및 제3자 제공 목적이 할인쿠폰 등 혜택 제공임을 명시한 바,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. 다만, 현재는 일본본사에서 지급하는 쿠폰이 없음에도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온라인스토어 가입시 국외이전 및 제3자 제공(선택사항)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권고한다.

또한, 피심인의 앱을 통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바코드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정보의 수집주체 및 이용목적 등은 현시점에서 명확한 확인 및 판단이 어려우나, 온라인스토어 회원정보의 처리위탁 등 과정에서 통합회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의 바코드가 온라인스토어 회원정보와 결합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·이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권고한다.

- ① 온라인스토어 가입시 국외이전 및 제3자 제공(선택사항)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, 통합회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의 바코드가 온라인스토어 회원정보와 결합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·이행할 것
- ②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①의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



## VI. 결론

피심인의 舊 정보통신망법 제63조(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)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(과태료)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, 온라인 스토어 가입시 국외이전 및 제3자 제공(선택사항)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통합회원 미가입 이용자의 바코드가 온라인스토어 회원정보와 결합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·이행할 것을 보호법 제61조(의견 제시 및 개선권고)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할 것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**2024년 8월 28일**

위 원 장      김 진 욱

위      원      김 진 환

위      원      박 상 희